

노동시간 단축 6개월 계도기간 도입

당정청, 업종별 특성 반영한 노동시간 단축 방안 마련키로 소득주도성장 등 3대 정책기조 유지하되 부작용 보완 남북·북미회담 후속조치 논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당,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에 野 협조 촉구키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근로시간 단축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에 대해 올해 말까지 6개월 간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다. 박법계 수석대변인은 20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현행에서의 제도 연착륙을 위해 당분간 행정지도 감독은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금년 말까지 6개월 간 계도기간, 처벌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준에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함에 있어서 형사법적으로 국가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안과 사회적 공감대가 절대 다수로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재량을 발휘할 여지가 있다"면서 "즉 검찰단위에서는 기소유예나 입건유예, 재판단계에서는 선고유예같은 여러 방식으로 정상 참작할 수 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책임조각사유라고 형법적으로 범죄구성 자체를 성립시

키지 않는 방법도 있다"고 부연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최저임금 정책 및 일자리안정자금 개선 방안, 근로시간 단축 시행 대비 점검 등 주요 노동현안 대책과 판문점선언과 북미 정상회담에 따른 후속조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중소기업 및 영세소상공인 건설업 등 준비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과 업종 중심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의 연착륙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며 "일과 생활의 균형이라는 큰 틀 안에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정청은 고용 및 소득분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지표의 악화에 대해 엄중한 우려와 책임감 표명하고 소득주도성장 및 혁신성장의 균형 있는 추진과 공정경제의 기반확립 등 3대 정책기조를 유지

하되 단기적인 어려움과 부작용을 보완하는 노력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인상과 관련해 박 수석대변인은 "개정 취지와 내용, 영향 등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이번 법 개정으로 임금인상 효과가 감소할 수 있는 저소득 노동자에 대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년도 최저임금을 기한 내에 의결할 수 있도록 노동계 설득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당정청은 저소득맞춤형일자리 및 소득지원대책을 다음 달 초까지 마련해 발표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소득분배개선은 일부위 소득 개선에 초점을 두고 근로능력계층에는 일자리를, 취약계층에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저소득맞춤형일자리 및 소득지원대책을 다음 달 초에 마련하고 발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혁신성장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규제혁신을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핵심선도사업 추진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혁신 5법을 조기입법화해 혁신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 예산, 세제, 제도 개선을 패키지 형태로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속히 국회가 정상회담 상가입대차보호법, 가맹사

업법 등 소상공인과 서민 생활에 밀접한 민생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과 긴밀히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약속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외에도 당정청은 정책을 국민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전달하는 홍보 강화의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소통을 보다 활성화하기로 했다"고도 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이날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우리의 주도적 노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개최된 점을 높게 평가하고 향후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에 정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8.15 아산가족상봉행사 개최, 2018 아시안게임에서 남북협력관계 구축, 남북경제협력사업에 대한 공동연구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남북, 북미관계가 서로 유기적 선순환구조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한미 간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가와의 외교협력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고 전했다. /뉴스

“남북 경협, 남북러 3각 협력돼야...철도·가스·전기 유망”

러시아 합동 취재단 인터뷰 문 대통령 “평화체제 구축시 본격적인 경협 시대 열려”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순방을 하루 앞둔 20일 청와대 본관 추모실에서 러시아 타스(TASS)통신사·국영 방송 러시아1과 러시아24·로스스카야 가제타(Rossiskaya Gazeta) 신문사 합동 취재단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남북 경제 협력 시대가 열릴 텐데, 그때의 남북 경제 협력은 러시아까지 함께하는 남북러 3각 협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러시아 국민방문 전날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러시아 합동 취재단과 인터뷰를 갖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또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서 같은 목표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상황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푸틴 대통령이 일관되게 많은 도움을 줬다. 유엔 안보리의 강도 높은 제재 결의에 동참하고, 또 그 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면서 평화적인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일관되게 주장함으로써 오늘의 상황을 잘 이끌었다”면서 “지금까지 보여준 푸틴 대통령의 협력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협력을 기대하려고 한다”며 남북러 3각 협력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남북러 3각 협력이 빠르게 시작될 수 있는 사업으로 철도, 가스, 전기 분야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철도는 남북 철도가 연결되고, 그 연결된 남북 철도가 러시아 시베리아 철도와 연결이 된다면 우리 한국으로부터 유럽까지 철도를 통한 물류 이동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그 것은 북한에게도 큰 경제적 이익이 되고, 우리 한국에게

도 엄청난 이익을 주게 된다. 물론 러시아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러시아 가스의 경우에도 가스관을 통해서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북한으로 공급되고 또 한국으로 공급되고, 나아가서는 해저관들을 통해서 일본으로까지 공급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전기 분야 관련 “러시아가 추구하는 에너지믹스 부분도 동북아 전체가 함께 하면서 러시아에서 생산된 전력이 북한과 한국으로,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일본으로까지 공급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것이 앞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어떤 공동번영을 아주 촉진하는 그런 길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 밝힌 한-러 경제협력 9브릿지 구성도 이날 인터뷰에서 언급했다. 9브릿지는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농업, 수산, 일자리 등 9개 분야에 대한 양국 협력 사업 추진을 의미한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더 필요한 것은 아홉개 다리별로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빨리 만들어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한-러 경제공동위원회 액션플랜을 마련하

고 있는데 논의가 굉장히 많이 진전됐기 때문에 이번 9월의 동방경제포럼에서는 양국 간에 서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면서 “이런 양국 간의 협력이 가속화되는 덕분에 지난해 양국 간의 교역액은 100억 달러 정도, 그 전년도보다 40%나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아직 우리 한-러 간의 경제 협력은 이제 시작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그렇게 실천될 수 있도록 푸틴 대통령과 심신을 다해 협의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뉴스

민주, 전당대회 작업 착수... 전준위 위원장에 오제세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구성 세부 작업을 착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전준위 구성의 건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구성의 건 ▲권리

당원 선거권 부여 기준 마련의 건 등을 심의했다. 해당 안건은 오는 22일 당무위원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전준위는 8월25일 개최 예정인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를 맡는 당내 기구다. 전준위에서는 당 지도부체제 개편과 함께 대표·최고위원 선출방식 등 전당대회 규칙을 마련하게 된다.

민주당은 우선 전준위위원회 4인의 오제세 의원을 선임하기로 했다. 부위원장은 민병두 의원, 총괄본부장은 김민기 의원, 간사는 김영진 의원이 각각 맡기로 했다. 이 밖에 남인순·서형수·조웅천·정재호·김종민·제윤경·송옥주·정준숙·이재정·윤준호 등 10명의 의원이 전준위원으로 참여한다. /뉴스

선관위위원장은 3인의 노응래 의원을 추대하기로 했다. 선관위원으로는 안호영·송갑석·이재정·권미혁·이후삼·박경미·오영훈 등 7명의 의원이 합류한다. 조강특위 위원장에는 3인의 이춘석 의원을 내정했다. 또 조강특위 위원으로 임종성·한정애·백해련·박재호·이후삼·심기준·심동근 등 7명의 의원과 최은영 변호사, 고성민 전국대학생위원장을 내정했다. /뉴스

평화당 신임 당대표 ‘온도차’ 박지원 “새 인물 내세워야” 정동영 “중진 역할이 중요”



박지원 의원



정동영 의원

박지원 민주당 평화당 의원이 20일 8월 초 예정된 조기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인물을 대표로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동영 의원은 “중진 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온도 차를 보였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동 인근 식당에서 진행된 평화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 조배숙은 전면에 나서지 말고 얘기했다”며 “우리 중에서도 새로운 사람을 내세워 보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오전에 정동영, 천정배를 만났는데 정동영이 ‘제가 책임지고 해보겠다’고 하더라”며 “정치는 경쟁이니까 누가 나온다고 하는데 못 나가게 할 수는 없다. (정동영이) 경선하겠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이 변화된 모습을 바란다”며 “인물도 키워야 한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정 의원은 “중진 의원 책임론을 내세웠다. 정 의원은 ‘평화당 입장에서 차기 당 대표의 역할은 막중하다’며 ‘차기 당대표는 평화당을 제대로 된 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더

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우리보다 큰 정당들과의 경쟁과 같은 과정에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평화당은 창당 선언만 하고 바로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제대로 창당이 안 된 상태”라며 “제대로 된 당을 만들어야 한다. 평화당에서 당을 만들어 본 경험 있는 사람은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등 중진 의원들이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조선의원이 당대표 하면 일단 새로운 인물에게 단기적으로 이미지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당 건설 과정에서, 당 운영과정에서 고도의 경험과 정치력이 필요하고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단순한 이미지 정치로는 오래가지 못할 위험성도 생각해야 한다”며 “지금은 조선 대표가 아닌 중진 대표가 더 필요할 때”라고 보았다. 정 의원은 “당 대표를 맡아 당을 제대로 만들어보고자 한다”는 뜻을 최근 의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진들이 책임지고 상호 협력해 당을 만들고 같이 협력해 당을 운영하면서 안정화시키는 게 더 책임 있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뉴스

중기 성과급 20% 세액공제 제도화

평화당 조배숙 대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안 발의



조배숙 대표

민주당 평화당 조배숙 대표가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의 2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세액공제제도의 신설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조배숙 대표가 이날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안은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의 2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여 중소기업의 성과급 지급을 장려하고 이를 바탕으로 극심한 대·중소기업 간 임금불평등을 완화시켜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유치를 지원하고자 제안되었다. 아울러 세액공제의 조건으로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성과급 제외)이 직전연도 보다 감소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여 기업이 정액급여를 줄이고 특별급여만을 늘려 편법적 세금 절감을 시도할 가능성을 차단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임금불평등 지수는

4.7배로 OECD 평균(3.4배)을 훌쩍 넘어섰으며 중위임금의 2/3 미만인 저임금자 비중 또한 25.1%로 OECD 평균(16.3%)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임금불평등 현상은 대·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특히 성과급 등 특별급여 수준의 격차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정액급여는 대기업의 75% 수준이지만 성과급 등 특별급여 수준은 19%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임금 격차는 우수인력의 중소기업 취업기피 및 이탈 현상으로 이어져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떨어뜨리는 악순환 구조로 고착되고 있다. 조 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은 임금격차의 주요원인인 중소기업의 낮은 특별급여 수준을 상승시켜 임금불평등의 완화와 중소기업의 인력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조배숙 대표는 “임금제에 이른 임금 불평등이 대·중소기업 간 경쟁력의 격차로 이어져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소기업 성과급 세액공제 제도 신설을 통해 임금불평등의 주요원인인 대·중소기업의 성과급 등 특별급여 격차를 완화시켜 한국 경제의 기술인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민주당 전북도당, 오늘 ‘든든한 지방정부’ 성공 현안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든든한 지방정부’ 성공을 위해 6.13지방선거 당선자들과 머리를 맞댄다. 20일 민주당 전라북도당(위원장 김윤덕)에 따르면 20일 오전 11시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든든한 지방정부’ 전북현안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윤덕 도당위원장과 이춘석 사무총장, 이수혁 국회의원, 송하진 도지사, 양용모·채정룡·김형중·이수혁·박희승 지역위원장, 기초

단체장 당선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단체장과 지역위원장 당선자들과 함께 전북도 및 시군별 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김윤덕 위원장은 “6.13지방선거에 도전들이 보내주시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며 “항상 ‘겸손과 낮은 자세’를 견지하며 집권여당으로서 전북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